

논단

UR, GR, TR 전개와 동태적 대응 전략

金永佑(科學技術政策管理研究所長)

1. 새시대 전개(WTO 체제)의 함의

'80년대 중반 이후 UR 협상이 시작된 이래 10년간 국제 경제 질서 재구성 노력은 WTO 체제 형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고 있다.

자유화 원칙과 내국인 대우의 보편적 기준을 세계 경제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유 무역의 실현과 세계 후생의 증진을 도모하는 국제 경제 질서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후발자나 개도국의 공업화 정책, 기술 개발 정책의 선택 범위를 현격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WTO 체제의 출범은 단순히 GATT 체제의 대체라는 관점이 아닌 국제 경제 질서의 기조 변환과 대응 과정에서 예견되는 국제적 준거 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 체제의 성격 규명과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국가별 대처 대조표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국가 발전의 정향(orientation)을 구획해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WTO 체제가 선진국 또는 후진국 중 어느 나라에 유리한지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에 호순환을 예고할 것인지, 아니면 악순환의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WTO 체제가 구체적인 경제 활동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세계 경제의 틀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별 국가의 산업 정책, 무역 정책, 과학기술 정책, 환경 정책, 노동 정책, 투자 정책의 차별성을 대폭 줄이려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UR(무역 라운드), TR(기술 라운드), GR(환경 라운드), BR(노동 라운드)가 동시에 무역과 연계(trade related)되어 추진되고 그 결과 국제 경제 질서는 종래의 선언적인 것으로부터 규제와 제약이 엄격히 가해지는 세계 경제의 관리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탈냉전 이후 국가 경쟁의 대상이 군사 외교로부터 경제 기술로 바뀔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패권, 기술 패권이 군사 패권, 정치 패권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집단 안보 체제의 국제 정치상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역 경제 협력 체제의 형성 및 역할이 부각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기술보호주의의 강화와 기술 개발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형성 과정과 같은 시기에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금까지의 세계 전략, 국가 전략을 반추하고,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역동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미국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활동과 일본의 기초 과학 육성 및 세계 공헌 전략, EU 통합과 ETC(유럽 기술 공동 연구 프로그램) 등이 21세기를 준비하는 선진국의 대표적 대응 전략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NAFTA, EU와 아시아 지역 협력체 형성 움직임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중화 경제권 형성이나 일본의 탈아론(脫亞論), 입아론(入亞論)의 끊임없는 논쟁도 현상적으로는 무한 경쟁 시대에의 대응으로 이해되지만 근원적 관점에서 보면 21세기를 대비한 국가 발전의 전략 체제 재구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넷째,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국가간 경쟁의 실체가 기술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WTO 체제하에서는 모든 생산 요소 및 거래의 자유화, 개방화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기술의 국제 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 협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생산 요소중 자본, 노동, 자원은 모두 국제간 자유 거래를 조장하지만 기술 요소만을 이전 제약을 엄격히 함으로써 기술 경쟁으로 국가 경쟁력의 승부를 걸겠다는 선진국의 대타협이 곧 WTO 체제의 근본 취지 내지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WTO 체제의 함의는 21세기에도 20세기의 선진국간의 경쟁을 지속하면서 세계 경제의 관리 체제 강화로 중진국 또는 선발 개도국의 선진국 진입의 길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선진국간 기술의 무한 경쟁과 기술보호주의를 국제 경제 질서의 틀로 정착 발전시키려는 기도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진단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 나라는 대외 지향적인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WTO 체제의 반사 이익을 상대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에서의 열위한 상황으로 선진국 진입이 좌초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UR, GR, TR의 전개 내용과 영향

UR이 지난해 12월 타결된 이후 GR(환경 라운드), TR(기술 라운드), BR(노동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이 꼬리를 물고 전개될 전망이다. 물론 이들 라운드가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언제 타결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국제 경제 질서는 전후(IMF, GATT)와는 판이한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개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개편 과정에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라운드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 하에 하나의 틀로 수렴되고 있다는데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선진국 그룹인 OECD의 정책 선언(new rules of game)에 그 뿌리를 두고 '80년대 이래 논의되어 온 과제가 각각 개별적인 라운드로 집약되고 있는 것이다. UR 타결안에 명시된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구개발 보조금 등 규제 조건도 사실은 OECD 정책 선언의 일부가 실현된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국제 환경 표준화(ISO 18000)의 협상을 포함한 GR과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 협상 단계로 돌입할 전망이다. TR도 이미 OECD에서 기본 철학과 규제 방법 및 기준이 논의 되어 왔던 과제이다. 그 결과 UR, GR, TR 등은 WTO라는 새로운 세계 경제의 관리 체계의 우산 속에 질서 있게 포함될 것으로 본다.

공정한 세계 교역 질서의 확립과 이를 통한 세계 번영을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신국제 경제 질서(WTO 체제)의 협상 목표, 협상 과정상 준거는 무역과의 연계와 국가간 관행의 접근으로 집약된다. 전자는 협상 결과의 강력한 실천을 목표로 한 것이며 후자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 형성(1인당 소득 1000달러 이하의 개도국에 대한 예외 규정은 용인될 것이지만)에 목표를 두고 있다.

1. UR 타결안

UR 타결안 중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관한 것인데 이는 OECD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그 일부가 타결안에 포함되고 있다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①연구개발 관련 보조금¹⁾

○산업 연구(Industrial Research)에 대하여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75% 이내로 제한

○경쟁 전 기술(Precompetitive Technology) 에 대하여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

②지적재산권보호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D/B 보호 영업 비밀 등이 추가되고 있으며 기존 국제 협약에 대한 Plus 방식으로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 기준 강화(기간, 범위, 수준)와 분쟁 예방 및 해결 절차의 강화

○대여권의 인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인정, 보호 기간 연장

○음반의 소급 보호

○IC 및 이를 내장한 반도체 칩과 최종 제품까지 보호 확대 등

③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연구개발 허용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보면 대체로 허용가능 범위의 보조금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즉, 특정 연구개발 사업 및 공업 기반 기술 사업, 정보 산업 기술 개발 사업, 대체 에너지 기술 기반 사업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는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 등 전주기의 연구개발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산업 연구와 경쟁 전 개발 활동 프로젝트를 구분하고 ㉡ 특히 특정 기업 및 산업의 제품 개발 다시말해서 경쟁후 기술이 일부 포함된 것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별도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허용 보조금에는 정부 보조금(출연금)과 세제 및 금융상 지원, 정부 구매상 지원 등 모든 차별적 지원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정부 지원 보조금을 연구개발 과제 또는 프로그램별로 합산 산출하는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 보조금에는 정부의 직접 지원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투자 기관(보조금 운용에 정부의 실질적 영향이 있을 경우) 및 민간 기업 등이 출연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의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보조금으로 해석된다.

<표>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의 정부 부담 비율

선도 기술 개발 사업		공업 기반 기술 개발 사업	
과제명	비율(%)	과제명	비율(%)
차세대 반도체 기반 기술	46.8	공통 애로 기술 및 요소 기술 개발	57
고선명 TV 연구	41.1	첨단 산업 기술 개발	20
신약·신농약 연구	50.5	중소기업 기술 지원	74
첨단 생산 시스템 연구	51.5	국제 공동 기술 개발	100
첨단 소재 연구	58.2	대일 의존 핵심 기술 개발	52
차세대 자동차 연구	48.8	기술 개발 기획 평가	100
신기능 생물 소재 연구	51.7		
환경 공학 연구	70.4		
신에너지 연구	72.8		
차세대 원자로 연구	19.2		
광역 종합 정보 통신망	10.4		

- 주: 1.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총연구 기간 동안의 총연구비 투자 계획을 근거로 산출한 부담 비율임(고선명 TV는 '90~'93년 실적치).
2. 공업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87년에서 '92년 사이의 연구 실적치에 대한 비율임.
3. 공업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자금 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참여 기업수 및 중소/대기업의 형태에 따라 총개발 사업비의 2/3 이내에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고, 정부 주도의 과제인 경우 100%까지 지원한다. 즉, 주관 기관이 중소기업이거나 국립 및 정부 출연 연구소, 산업 기술 연구 조합, 대학이며, 중소기업이 2 이상이고 참여 기업의 2/3가 넘는 경우 총사업비의 2/3까지 지원하며, 그외는 총사업비의 1/2까지 지급한다. 대기업이 주관 기관이고 중소기업이 2 이상이고 참여 기업의 2/3가 넘는 경우 총사업비의 1/2, 그외는 2/5까지 지원한다.
4. 차세대 원자로 사업과 광역 종합 정보 통신망의 경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을 정부 기관으로 간주할 경우 각각 100.0%, 51.6%로 정부 부담 비율이 더 높아짐.

2. GR의 전개 상황

GR은 지구 환경을 인류 공동으로 지키자는 소위 Global Project로 추진되는 환경 규제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 및 보호 촉진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GR에서 규제 대상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환경피해를 어디까지 계속하며 규제 시기의 기준 및 적용 지역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계 기술 질서 형성의 강력한 전략 변수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1989년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및 생산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마련된 것을 시발로 해서 1992년 리우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 관련 지구 기후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유해 폐기물의 국제 이동과 관련 바젤 조약이 1989년 체결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리우 회의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이전 촉진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환경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특히 강조된 바 있다.

문제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 이전의 촉진이라는 명분이 실제에 있어 환경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말미암아 환경 관련 기술의 선진국 독점이 더욱 가속화되고, 환경 규제가 개발도상국 특히 NICs 제국의 공업화 및 공업 구조 고도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고 기술패권주의의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 환경 친화적 상품의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해 E마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 청정 제품 및 청정 제품 생산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 ISO 14000(환경 경영 국제 규격)의 제정 착수, 그리고 환경 관련 국제 협정의 체결 등 일련의 상황 전개로 GR 문제가 UR 타결시 상당 부문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개도국 등의 반대로 Post UR의 과제로 이행되고 말았다. 그러나 GR 문제는 이미 다자간 협상 단계로 이행된 것으로 상정하여 시급히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OECD의 국제 기술 공동 규범(TR)

OECD는 각료 회의 정책 선언문을 통해 자유화 규약(Codes of Liberalization)과 내국인 대우 규약(National Treatment Instrument)의 정신에 입각한 다음 7개 항의 규범 설정 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앞으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 규범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기초 연구에 대한 공공 부문 등 장기적 연구

○기술 확산 정책

○인력 개발

○민간 R&D 지원 및 과학기술에 대한 외국의 접근

○국내 정책 관행의 국제적 조화

○과학기술 국제 협력

○개발도상국을 위한 과학기술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과학기술 정책의 조화

개별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및 체제에 따라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무임승차(free riding) 효과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가간 과학기술 관계에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학기술 정책의 국가간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무임 승차 효과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가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정책

기초 연구를 제외한 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해당 산업에 대한 여타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제 무역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하고 분쟁의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규범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산업, 경쟁전단계 기술 등에 대한 국별 분류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와 분류가 있어야 하며, 또한 국가별 지원의 구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접근에 있으므로 (미국: 대학 중심-접근 용이, 일본: 기업 중심-접근 장애), 경우에 따라 구조 조정(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 SII)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OECD는 회원국의 지원 제도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실시, 1992년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의 계속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지원의 시장 왜곡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것은 기술 개발 지원의 대상 범위가 선진국의 판단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시장 파급 왜곡 효과의 설정에도 자의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크다.

③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접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의 외국인 기업 및 외국의 연구자 혹은 연구 기관에 차별없는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특히 각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략 기술, 핵심 기술의 분류 기준, 외국 기업의 참여 허용 여부, 지원 수단 등을 조사하여 새로운 규범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④과학기술 인력의 자유 이동 보장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과학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를 저해하는 제 국내 규제의 정비를 위한 기본 규범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⑤과학기술의 세계화에 따른 대비

기업 활동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연구개발 활동의 세계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국가의 경제,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호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들 진출 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과 동등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등한 연구개발 환경 및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시점에서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 등이 아직도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OECD는 계속 연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 주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정보 시스템의 보안

○OS/W 관련 지적소유권

○자동화 생산 체제와 관련된 지적소유권

○세계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는 산업(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기술 표준(특히, 정부 통신 분야)

○정부 지원, 기업 흡수, 합병 등에 따른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규범

○제3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관련 환경 정책 및 분쟁 해소

○생명 공학 기술과 관련된 사항(연구, 실험, 상업화 등에 있어서 code of good conducts)

문제는 1996년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될 때는 TR이 논의의 과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쌍무 협상 또는 다자간 협상 단계로 이행되지 않을까 전망되므로 이를 상정한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의 전면적인 재정검, 재구축 작업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III.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새로운 틀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요체이고 앞으로 기술 무한 경쟁 시대의 도래, 지식 기술 정보 패러다임의 전개로 특징지워지는 세계 경제의 성격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혁신 전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WTO 체제 형성과 TR의 실현 전망을 전제하면 과학기술 정책, 국가 연구개발 사업,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시책이 신국제 경쟁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에서 재편될 필요가 시급하다 하겠다.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이 마련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시급히 실천에 옮겨야 할 정책 과제로 나누어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기조 변화

첫째,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국가 전략상 위치는 산업 경쟁력 강화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과학기술이라는 관

점과 산업 정책, 환경 정책, 교통 정책, 노동 정책, 교육 정책 등 각 부문의 개별 정책이 기술 지향적으로 개편될 것을 요구하며, 특히 과학기술 혁신 전략이 국가 발전의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 정착과 국제화 촉진 그리고 국제 기술 무한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이 동태적이고도 다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상황 변화에 다른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기술 분야별, 연구 수행 주체별, 정부 부처별로 과학기술 혁신 활동이 다원적으로 추진되고 그러한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전략 개념을 기준으로 통합 조정되는 성숙한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 하에서도 과제 선정이나 연구개발 방법에서 전략적 우선 순위 개념이 적극 구현되어야 하며 아울러 과학기술 부문에의 자금, 인력, 정보의 집중 배분에 대한 국민 이해, 국민 지지가 선행되도록 하고 또한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자만이 아니고 광범위한 국민 참여 속에 개발 촉진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기술 문맹의 퇴치, 기술 경쟁력 강화, 혁신 결과의 경제적·사회적 확산을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지식 기술 정보 패러다임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기초 변화에 대해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전제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새로운 틀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당면 대책

첫째, WTO 체제 형성과 1996년 OECD가입에 대비해서 정부 보조금이 제소 가능한 보조금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 기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총점검하여 조기 추진 완료 과제와 수정 필요 과제 그리고 계속 과제로 구분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둘째, OECD 정책 선언문에서 명시되고 있는 국제 공동 규범(New rule of game)의 내용과 앞으로의 진전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점검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차체에 산업 기술, 첨단 기술에 관한 한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 중심과 정부의 지원 기능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따라서 과학기술 혁신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기초 연구, 인력 개발, 공공 연구에 집중하고 동시에 연구개발 인프라스트럭처, 연구 분위기 조성 등 기반 확립에 집중토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 자원 투입의 지속적 확대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두 개의 기둥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실천하고 기술 수요 변화에 부응한 연구원 recycle이 가능할 수 있는 유연한 연구 조직 및 예산상 조치가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연구개발 자원의 배분 원칙은 선프로그램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종합 조정과 각 부처의 프로젝트 수준의 연구 기획 평가 강화가 조화되는 국가 연구개발 추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 대학의 연구 기능의 확충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reengineering을 단행할 것이며 연구소의 자율 경영과 연구원의 시대적 책무가 함께 강조되는 연구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과학기술자 및 기술 정책 전문가의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과학 기술 친화적인 지도 세력의 구축과 과학기술 중시의 정책 결정 과정 확립, 혁신 지향의 사회 가치 창조를 실현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 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신호, 송종국 외, 「기술 혁신을 위한 종합 낙찰제의 개선 및 대상 품목 확대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소, 1993.

경제기획원,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협정문」, 1993. 12. 31.

국가안전기획부, 「국제환경협약집(상), (하)」 1994.

김광두, 정운찬, 「금융 혁신과 기술 금융 제도에 관한 연구」, KIST 과학기술정책·기획본부, 1992.

김동현 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에 관한 연구」, KIST 과학기술정책·기획 본부, 1992.

김학수 외, 「UR 협정 최종 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박동현, 「첨단 산업의 지적소유권 전략(1)」, KIST 과학기술정책·기획본부, 1992.

법제처, 대한민국법령집, 각편

상공부, NAFTA 협정문, 1992. 9.

송종국, 「정부 부문의 과학기술 투자 확대 방안 연구」, KIST 과학기술정책·기획본부, 1992.

-----, 「기술혁신지향적 정부공공구매제도의 확립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소, 1993.

-----, 「우루과이 협정이 우리 나라 기술 혁신 제도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송종국, 오준근, 정상조, 「과학기술 관계 법제의 현황과 정비 방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1994.

유영, 「우루과이라운드와 과학기술 정책의 대응 방안 연구-정보 통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연구소, 1991.

이병호, 「EC 통합에 따른 표준화 발전 전망과 대책」, KIST 과학기술정책·기획본부, 1992.

주광일 외, 「UR 협정의 법적 고찰(상), (하)」, 법무부, 1994.

<국외 문헌>

Charnovitz, Steve, The Environment vs Trade Rules: Defogging the Debate, Environmental Law, Vol. 23, 1992.

Cherry, Christopher A., Environmental Regulation Within the GATT Regime: A New Definition of "Products", UCLA Law Review, Vol. 40, 1993.

Dunoff, Jeffrey L., Reconciling International Trade with Preservation of the Global Commons: Can We Prosper and Protect?, Washington & Lee Law Review, Vol. 49, 1992.

Goldman, Patti A., Resolving the Trade and Environment Debate: In Search of a Neutral Forum and Neutral Principles, Washington & Lee Law Review, Vol. 49, 1992.

Jackson, John H.,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IT press, 1989.

Jackson, John H.,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The Michie Company Law Publishers, 1969.
McDonald, Janet, Trade and the Environment: Greening the GATT: Harmonizing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New World Order, Environmental Law, Vol. 23, 1992.

Paul, Hastings, Janofsky & Walker,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Summary and Analysis, Matthew Bender, 1993.

Schoenbaum, Thomas J., Free International Trade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rreconcilable Conflict?, The American Journal International Law, Vol. 86, 1992.

주석 1) ○ Industrial Research: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해 동지식이 새로운 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계획된 調査 또는 研究를 의미한다.

○ 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 Industrial Research 결과를 商業用으로 쓸 수 없는 시제품의 창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 목적으로 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설계 또는 도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념적인 공식과 대체 상품·공정 또는 용역의 도안 및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한 시험적 계획을 포함한다. 기존 물품, 생산 공정, 제조 공정, 용역 기타 작업을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변경이 개선을 가져온다고 할 지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